

임대·수수료서 상권보호·건보료까지 ‘백화점식 토론’

文 대통령, 靑서 소상공인과 대화

소상공인 건의, 부처장관들 답변 “하반기 자영업자 특화상품 출시 매출 등 수치적용 시행규칙 개정”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혁신적 포용국가’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동행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대화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건의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답변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방식은 누구든지 참가해 자기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이전 경제인과의 대화 때도 적용됐다.

문 대통령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화가 끝나자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브리핑했다. 문 대통령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임대료·인건비 비용문제, ▲자영업자 재기 및 상생, ▲자영업 혁신, ▲규제개혁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비용 관련 내용이다. 김성민 마트협회장·이재광 가맹점주협의회장·이병기 전통시장 상인은 ‘카드수수료·가맹점 협상권 부여’ 등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관련 협상권 제한이 있었다. 그 경우, 협상하는 단체에 속한 경우와 안 그런 경우간 차별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조금 더 넓힌다면 우리가 노동조합단체 협약의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단체협약 효력을 미치게 하는 구속력 제도 같은 게 있

다. 그렇게 확장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접을 생각해서 판단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맹점 협상권 부여 문제는 단체 소속 가맹점과 그렇지 않은 가맹점 사이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 영세 가맹점 협상은 정부가 돕도록 하고 있다”며 “어려운 자영업자 관련 대출상품 내놓고 있지만 부족한 상황이다. 기업은행이 1.4%의 낮은 대출상품 운영 중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등이 하반기

기 중에 자영업자 특화 상품 내놓으려고 한다”고 했다.

다음은 상권보호 및 상생 내용이다. 이정식 중소기업살리기협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상 골목상권 대표 협의체 참여’를 요청했다. 마화용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사무총장은 ‘라벨같이 심각성’을, 정재안 소상공인자영업연합회 대표는 ‘자영업자 생활보장 제도 및 자영업자 의료보험 문제’ 등을 각각 지적했다.

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매출과 고용 등 구체적 수치로 적용하는 시행규칙을 이달말 또는 다음달 초에 개정할 계획”이라며 “골목상권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지자체와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홍중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라벨같이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면서 “합동단속으로 나아진 것으로 아는데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으로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라벨같은 특정 상표와 상품정보가 담긴 라벨을 바꿔 다른 회사 제품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를 뜻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업장 가입자로 고용하면 보험료가 낮고, 고용원이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는 어려운 난제”라면서 “(또) 퇴직하고 나면 보험료가 높아지는 문제점 등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과의 대화 후 낮 12시부터 45분간 오찬 간담회가 진행됐다. 오찬은 한식상차림으로 오곡밥 등이 제공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오곡밥은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주체로서 한데 어우러지는 ‘화합’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오찬 때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는 어려움이 많음을 알 수 있는 기회였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실과 정부는 이번 대화 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제안한 의견을 정적으로 ‘자영업 종합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여권은 오는 19일 후속점진회의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구제역 ‘소강상태’... 오늘 이동제한 해제

농식품부, 14일째 재발 안해 전국 소·돼지 백신접종 효과

설 연휴를 앞두고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다행히 확산되지 않아 소강 상태에 접어들어 모양새다. 방역당국은 추가 발생이 없다면 발생 농장 3km 이내를 제외한 곳의 이동제한을 안성은 14일, 충주는 15일 각각 해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충주시 주덕읍의 한우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14일째 재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월 28일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의 젖소

농가에서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한 후, 다음 날 안성시 양성면의 한우 농가에서 2번째 구제역이 확진됐고, 31일에는 경기도를 벗어난 충북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확산 우려가 커졌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 가축농가들은 큰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비상대응체제로 구제역 확산의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설 연휴 때 차량과 구성객들로 인해 구제역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했고 소독 강화, 백신 추가 접종 등 긴급 방역대책도 추진했다.

무엇보다 전국 소·돼지를 대상으로 한 백신접종이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당국에 따르면 구제역 기간 동안 전국

평균 항체 형성률이 소의 경우 97.4%, 돼지는 80.7%로 높은 형성률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아직 발생지역내 보호지역은 이동제한 중인 상황인 만큼, 전국적인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는 현재의 소독 등 차단방역 수준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구제역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국 포유류 도축장 83곳에 파견·배치된 시·군 소독 전담관을 통해 도축장 계류시설과 생육 운반차량 등이 꼼꼼히 소독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며 “특히 아직 철새 다수가 이동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만큼 가금 농장 등을 대상으로 예찰과 소독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수두, 백신으로 예방하세요”

국내 수두 환자가 10여 년 사이에 50배 가까이 급증하며 2월 초 환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선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스페이스 라온’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수두 예방 캠페인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직원 성추행’ 최호식 前 회장 ‘집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명령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호식이 두마리치킨 회장이 14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하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같은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피해자 동의로 신체를 접촉했고, 업무상 위력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은 상황에서 갑자기 호텔에서 뛰쳐나와 택시를 탄 것까지는 CCTV로 확인된다”며 “피해자는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인 반면, 피고인은 나이가 40세 가량 많다”고 지적했다.

권 판사는 당시 직원을 관리 감독할 권한을 가진 최 회장이 마련한 식사 자리를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식이 두마리 치킨’ 최호식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피해 직원이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그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냥한 태도를 보이며 러브샷을 하자고 한 점은 신체 접촉을 동의할 근거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거절하는 불의사 표시를 안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등한 입장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가 주변의 여러 여성을 보고 마지막에 용기를 내 뛰쳐나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범종 기자 joker@

신재생에너지 보급 늘린다 산업부, 오늘부터 지원접수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고는 이달 15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택지원은 3월 11일부터, 건물지원은 4월 1일부터 3주간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403억 늘어난 2670억원으로, 최근 3년간 지원규모가 2.67배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최근 태양광 설비의 경제성이 개선됨에 따라 지원내용과 대상이 대폭 변경됐다.

우선 태양광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지원이 강화됐다.

또 경제성을 갖춘 일반태양광 보조율을 50% → 30%로 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효율적인 설비관리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통합 모니터링시스템 확대도 적용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대한변협, 18일 ‘인권보고대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18일 오후 2시 회관 13층 대강당에서 ‘2018년도 인권보고대회’를 연다.

대한변협은 매년 국내 인권상황의 전반적 실태를 평가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 발간에 앞서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해 지난해 가장 중요한 인권 이슈를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변협은 이번 대회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미투운동과 2018년 대한민국’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다루는 첫 세션 좌장은 박종훈 변협 재무이사(변협 인권위원회 위원)가 맡는다. 발제는 양홍석

변협 사법인권소위원회 위원, 토론은 최용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와 박주현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가 참여한다.

미투 운동을 주제로 한 둘째 세션은 김학자 변협 인권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발제는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가, 토론은 임은정 청주지방검찰청 중추지청 부장검사와 김낙훈 다산저널 편집국장이 맡는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 보고대회를 통해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법치주의의 확고한 뿌리내림을 위해 슬기로운 해법과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범종 기자

해수부, 수산물 양식장 안전관리 강화

‘안전성조사 추진계획’ 최종 확정

앞으로 수산물 생산단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이 지난 13일 농수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라 해수부는 올해 조사 물량(1만3500건) 확대와 함께 양식장 조사체계를 마련해 넙치양식장은 연 1회, 뱀

장어·조피볼락·송어·미꾸라지 양식장은 3년 내 1회, 그 외 품종 양식장은 5년 내 1회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이 외에도 패류독소 조사지점을 2018년 93개소에서 올해는 102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육상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연안과 하천 및 호소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양식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약품에 대한 조사 빈도도 높여서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세종=최신용 기자